

주제회의  
청년

## 청년부채, 다차원적인 접근 필요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들어가는 이야기

2017년 8월, 장성의 한 저수지에서 모녀가 물에 빠진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 대부분은 죽음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되었던 ‘대학등록금’을 주요 키워드로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말했다. 이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왜 이용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다. 이전에 비해 나아진 장학금 제도나, 대학이 전부가 아닌데 등등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다뤄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로 끝났다. 처음 이 기사를 읽었던 순간이 기억난다. 출근한 사무실에서 종이로 된 신문을 펼쳤을 때, 모녀의 사건 기사 옆 컬러로 인쇄된 광고물 때문이다. 그 광고물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었다.

모녀는 정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까? 그들이 마주했던 문제가 등록금납부를 할 수 없는 것만의 문제였을까? 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단순 ‘대학 등록금’ 문제로 정의했을 때 이 문제는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빈곤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모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사안들 중심으로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별거 후, 혼자 딸을 양육해 왔으나 피부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 원에 생활해 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에 더해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며 이 과정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와 서류상 이혼상태가 아닌 별거 상태로 복지의 사각지대)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 친척들에게 요청했으나 친척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망 또한 빈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2017년 8월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청년을 만났다면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였을까? 혹 이미 시행 중인 정책 중 어떠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6년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 혹은 이행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 혹은 특정 사안에서의 경제적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 청년부채

가계부채 1900조 시대, 빚이 일상이 된 사회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부채는 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청년세대의 경제적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난 4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소득은 코로나 전과 비교(2018~2019년 평균 대비 2020~2021년 평균)해 4.7% 늘었고,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 6.7%보다 낮다. 청년들은 부족한 소득을 대출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20대 청년들은 코로나 2년 전과 비교해 팬데믹 기간 부채 증가율은 28.3%에 이른다. 소득보다 가파른 부채 증가율은 모든 가구의 특성이지만 20대 부채 증가율은 소득과 비교해 6배나 컸다. 20대 금융권 부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 명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전월세 보증금과 부동산 마련 용도도 늘었다(한겨레, 2023.06.19.). 먹고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소득 내에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확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3년) 상반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천654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차주(대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들이 소득 기반이 타 연령대에 비해 취약한 만큼 향후 30대 이하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도 중앙의 지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 금융복지지원사업인 광주청년드림은행(표1)을 통해 재무/채무 상담을 받은 청년의 신용 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35%~50%가 연체 상태이거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신용에 문제가 없는 일반 상태인 경우도, 빚을 빚으로 갚고 있는 상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용상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 실제 상담 이후 분석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채무조정제도로 신용 회복을 위한 단계를 제외하고 52%가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청년들의 신용 상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약한 고리임을 알 수 있다.

표1. 광주청년드림은행 재무/채무상담 청년 신용 상태 분석

연도	상담 인원	신용 상태						
		일반	연체 중	신용 유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미확인
2018	247(명)	154	54	26	6	7	0	-
	100(%)	62.4	21.9	10.5	2.4	2.8	0	-
2019	249(명)	158	43	29	15	3	1	-
	100(%)	63.5	17.3	11.6	6.0	1.2	0.4	-
2020	377(명)	186	53	103	25	9	1	-
	100(%)	49.3	14.1	27.3	6.6	2.4	0.3	-
2021	460(명)	242	51	128	23	9	4	3
	100(%)	52.7	11.1	27.8	5.0	1.9	0.9	0.6
2022	424(명)	296	57	46	17	7	1	-
	100(%)	69.8	13.4	10.8	4.0	1.7	0.2	-

\*일반: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 \*신용 유의(채무불이행): 3개월 이상 연체

표2.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 청년 비금융/ 비재무 상황 분석

연도	불법 금융 피해	통신 요금 연체	건강 보험 연체	도박/ 중독	심리 호소	인지 능력	일 필요	노동 문제	주거	단절	가족	투자	사기
2018	12%	-	-	-	-	4.4%	-	3.6%	24.2%	-			
2019	10.8%	-	4.4%	4.8%	18%	4%	16.4%	1.6%	14.4%	-			
2020	11.4%	17%	10%	6%	16%	5%	28%	3%	17%	-			
2021	15.6	27.1%	9.7%	5.8%	15.4%	5.4%	24.7%	1.5%	10.4%	5.6%			
2022	13%	17%	4.5%	5.7%	16.7%	-	21%	-	12%	5.9%	20.5%	10.4%	8.3%

실제 청년세대의 약한 고리는 재무적 상황보다 비재무적 상황들에서 더 잘 드러난다. 통신 요금 연체와 건강보험료 연체는 생활 위기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는 특히나 최소한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고 보건의료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휴대폰이 단순 통신 기계의 기능을 넘어 개인인증 및 금융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 요금 연체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주요하게 주목해야 할 지표이다. 이외에 가족과 관련해 금전적, 관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 또한 20.5%로 높게 나타난다. 현시점에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부모님이 과거 부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혹은 채무조정제도의 경험, 돈에 대한 철학적인 측면들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주요한 부분이다. 청년세대가 성인으로서 가족들과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하는 과정의 정책적 지원과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불법 금융 피해는 평균 12.8%로, 피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불법 영업의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 중계플랫폼과 같은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대부중개업을 통해 시행되는 대출 중계플랫폼은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광고 내용은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로 개인들이 해당 정보를 신뢰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등록 대부업체를 수사한 결과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체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이라는 기조 아래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극적 조치들로 펼쳐진 결과이다.

청년세대가 20살 성인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자원들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세대 내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의 방법적 차이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얼마만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세대 내 격차는 부채 발생 시기와 목적, 대출처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들은 세대의 특성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해석된다. 부모의 자원 없이 소득 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이들의 선택은 대부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된 대출 제도이고 이 대출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잘 선택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 유무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회적 시선은 청년부채가 여전히 개인에서 사회적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건강, 관계, 미래 계획을 미루거나 노동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담감과 불법 현장(불법 금융 영업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정체성을 모두 겪게 되는 상황들이 계량적 지표 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청년부채는 개인의 서사로만 남아있다. 문제는 개인들 역시 이를 개인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년세대의 빚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것은 2001년이다. (언론 보도를 기점으로) 30대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112만 명으로 개인 신용불량자 절반 가까이가 청년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0대 신용불량자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매일경제, 2001.12.12.). 당시 청년층의 신용카드 사용증가와 카드사의 공격적인 영업 부작용이 2.30대 청년 신용불량자의 증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쉽고 빠른 대출 서비스를, 소비자들의 편의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기술 개발하며 결국 이를 남용하는 개인들의 무분별한 비합리성으로 포장하는 형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 저임금과 고용불안, 사채-신용불량,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빈곤층’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몰락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세계일보, 2003.07.30.). 2000년 중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과 함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이 급증했다(천주희, 2015). 이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곳곳에서 시작되었고 2006년 4월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기반으로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가 결성되어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경향신문, 2003.04.12.). 당시 이지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초등학생 납치를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청년부채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채 발생 원인과 성격이 변화했지만 사회적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천주희 문화연구자는 2015년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년부채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청년들이 삶의 비용을 대출이라는 금융부채를 통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채’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청년’, ‘부채’라는 말의 모호성은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위치가 제도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독립된 주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지역별로 청년정책 대상 확대, 인구정책의 일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청년 연령 상향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다.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결국 청년이라는 세대에 대한 이해 혹은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지점임을 알 수 있다.

## 청년부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청년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청년세대가 겪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지표를 통한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비화폐적 지표를 활용한 생활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청년생활경제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화폐적 지표에는 사회적 참여, 인적 관계,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여가시간, 미래 희망, 공적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 발생 요인과 문제 발생 후 위기에서 반등할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 위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빈곤 개념과 측정방식에 대한 정치적, 학문적 다양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인 부족, 결핍을 말하거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면적인 개념으로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결국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김교성(2011)은 빈곤 문제의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소득에 기초한 빈곤 지표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 내 대다수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지표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빈곤 정책의 진정한 효과는 빈곤층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존 빈곤에 대한 연구들이 빈곤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 비빈곤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빈곤한 주체들이 함께 꿈꾸는 지향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빈곤 연구는 여전히 빈곤층을 우리와는 다른 타자로 분리한 채 그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 문제 해결은 결국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생활경제 위기를 사전적으로 확인 대응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보료 체납, 금융 연체, 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회차별로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구를 발굴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는 물음표가 남는다. 실제 정부 복지서비스 대상 발굴됐지만, 주민등록상 주소 달라 혜택 못 받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청년세대의 주거 형태의 불안정성과 이동이 잦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혹은 대상층 제외 등의 경험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 혹은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자원 조달의 통로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세대의 생활 위기를 지점을 타 연령대와 다른 접근으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이다. 공적제도 이외에도 기존 금융회사들이 연체 시작된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 제도 안내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대출 중심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과 생활비 대출 정책이 시행중이며 주거와 관련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등이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 등이 있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출 정책들이 결국 청년세대 부채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 부담의 증가일 수 있으며 생활비 명목 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시작으로 타

금융권의 생활비 대출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다중채무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는 청년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러 제안을 하는 과정에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 청년부채 해결에 있어 쉽고 빠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청년세대만을 위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부채라는 현상은 드러난 숫자이고 숫자 속 개인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별적 차이들을 고려해 촘촘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실패는 끝이 아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인식해야 한다.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어떻게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가는 끝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교성, (2011). 사회정책 빈곤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1호 2011.4. p43-82. (40page)
- 천주희, (2015).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언론보도〉

- 한겨레, 2023.06.19. 빚이 소득보다 6배 빨리 늘었다... '팬데믹'이 20대에 남긴 상흔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96501.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96501.html)
- 경향신문, 2006.04.12. “빚 걱정해 학업포기 학우 늘어”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0604121827111>
- 세계일보, 2003.07.30. [긴급재조명 '新빈곤층']〈下〉 어떤 대책 필요한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000546>
- 매일경제, 2001.12.12. 청년신용불량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0176851?sid=101>

#### 〈기타〉

- 천주희. (2015). 한국사회의 대표, "을" 청년들의 부채문제 청년부채국회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p4-18.
- 한국은행. (2021).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상황. p32. 참고1.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보도자료.
- 한국은행. (2023). 금융안정보고서
- 광주청년드림은행. (2022). 상담 현황